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 - 20 (4호)
안전유형	보고(서면)

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

2021. 11. 16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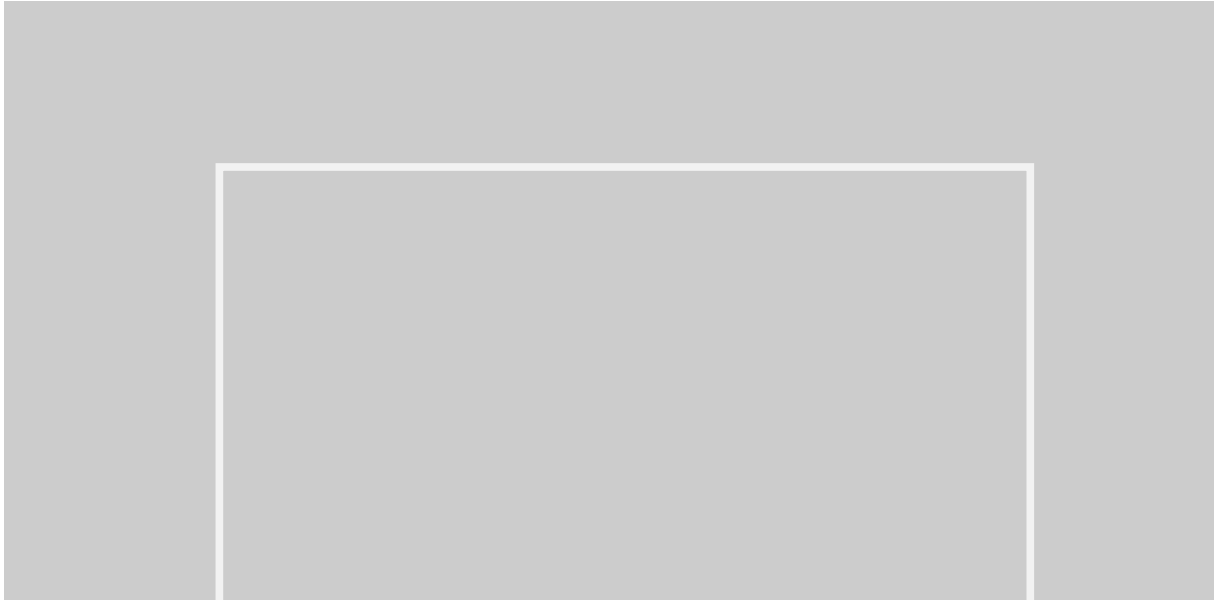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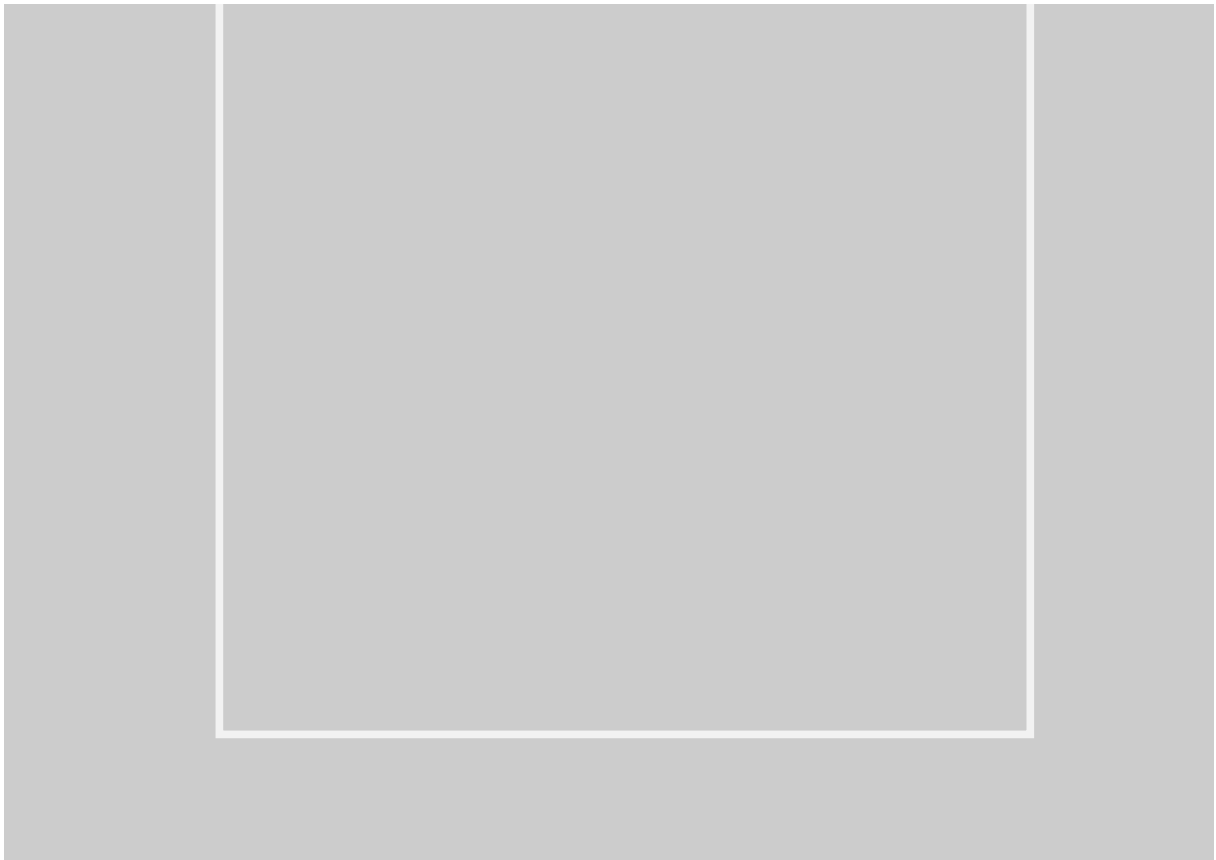
※ [요약]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점검 결과 보고

- 붙임 : 재활용품 보관량 및 단가 추이 (2020.7.~2021.10)

I . 개요	1
II .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(요약)	2
III . 재활용시장 동향	4
IV . 추진상황	5
V . 평가 및 향후계획	9
【붙임1】 이행과제별 추진상황	10
【붙임2】 재활용시장 동향('20.7~'21.10월)	12



요약



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점검 결과 보고(요약)

◆ 안정화대책 이행에 따른 **폐기물 처리상황은 안정적 추세**

- ① **재활용시장 수급안정**, ② **공동주택 수거원활**, ③ **보관물량 여유확보**

□ 재활용시장 동향

◇ (재활용시장) 유가상승에 따른 재활용가능품목 단가 상승* → **수급 안정**

* PET : 209원('20.10) → 331원('21.10), 폐지 : 69원('20.10) → 151원('21.10)

- 전국재활용업체(548개) 실질보관량 130,727톤 (보관허용량 498,432톤 대비 26%)

○ (공동 주택)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 안정화율* 증가('20.7월 60.2% → '21.10월 91.9%)
→ 페플라스틱, 폐지 등 **수거 원활**

* 전국 공동주택(30,676단지) 중 공공수거 및 가격연동제 적용 비율로서, 안정화율이 높을수록 수거대란 발생 가능성 감소

○ (민간선별장) 전국 민간 선별장(154개소) 보관률 26.5% → **물량 여유**

- 수도권 민간 선별장(77개), 재활용가능품목(PET, 폐비닐, 폐지 등) 실질 보관량 13,078톤 ('21.10월 기준 보관허용량 45,765톤 대비 28.6%)

* 수도권 민간선별장 실질보관량 18천톤 이상시 비상조치 발령 → 공공소각장 처리 등 대응

□ **주요 이행실적** : 31개 이행과제 모두 추진완료(19개) 또는 추진중(12개)

○ (폐기물 수거지원 강화) 자원관리 도우미* ①**재활용불가품목 사전 선별**, ②**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·홍보 활동 지속**

* '20년 10,853명 (422억원, 4시간/일인) → '21년 9,828명 (947억원, 8시간/일인)

○ (재활용업계 지원)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(32.5억원), 시멘트소성로 열회수 지원(7.4억원), 재활용업체 육성유자 지원(1,399억원)

○ (공공비축시설* 확충) '23년까지 비축역량 8배 이상 증가(2,870톤→23,670톤+a)

* '20 1기(정읍, 2,870톤) → '21 3기(안성대구청주, 10,000톤) → '22 2기(음성, 10,800톤) → '23 1기(양주, 미정)

○ (1회용품·재포장 제한) 다회용컵 확산 등 자발적 협약체결('20.11월, 커피 19개사),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('20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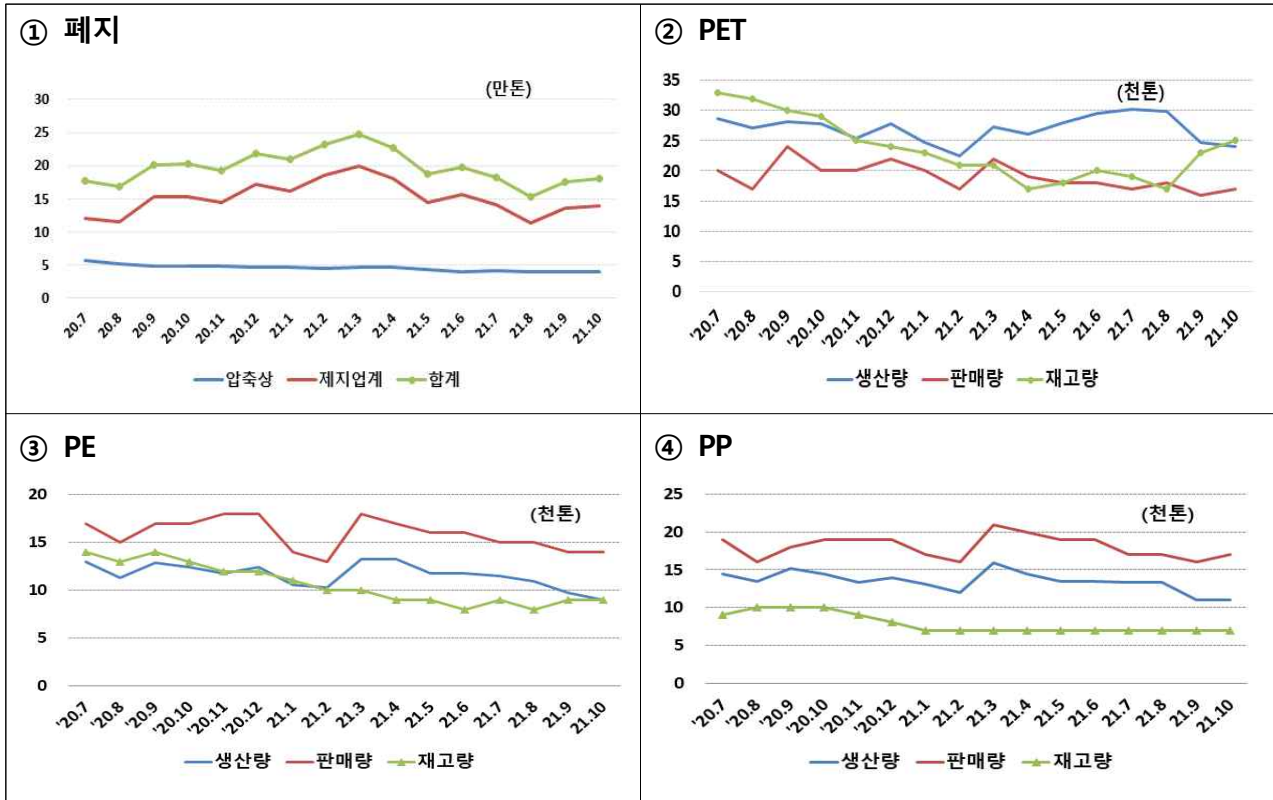
○ (공공수거제 법제화)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 직접·대행 계약, 가격연동제 적용 의무화 등 지자체 책임 강화 법안 추진 중

□ **향후 계획** : 재활용시장 수급상황 격주 모니터링 및 보고(필요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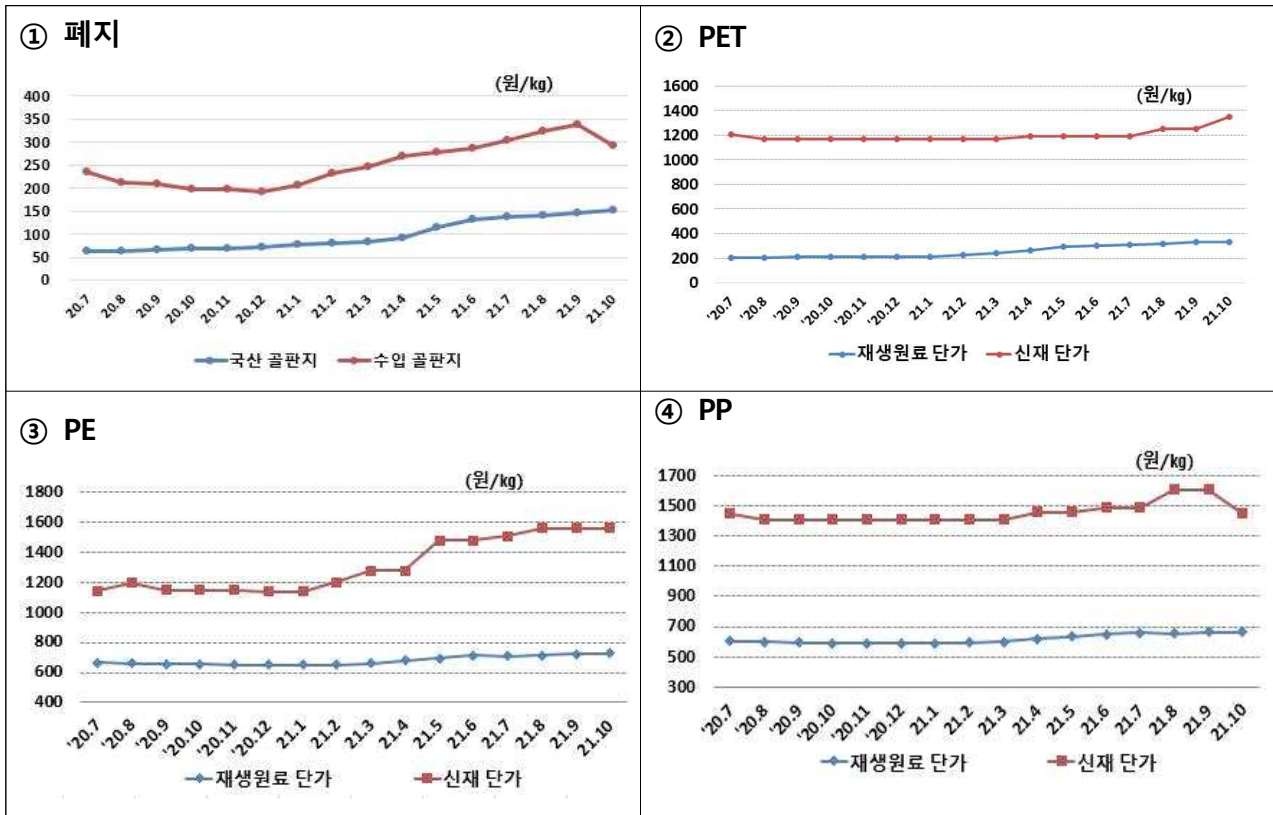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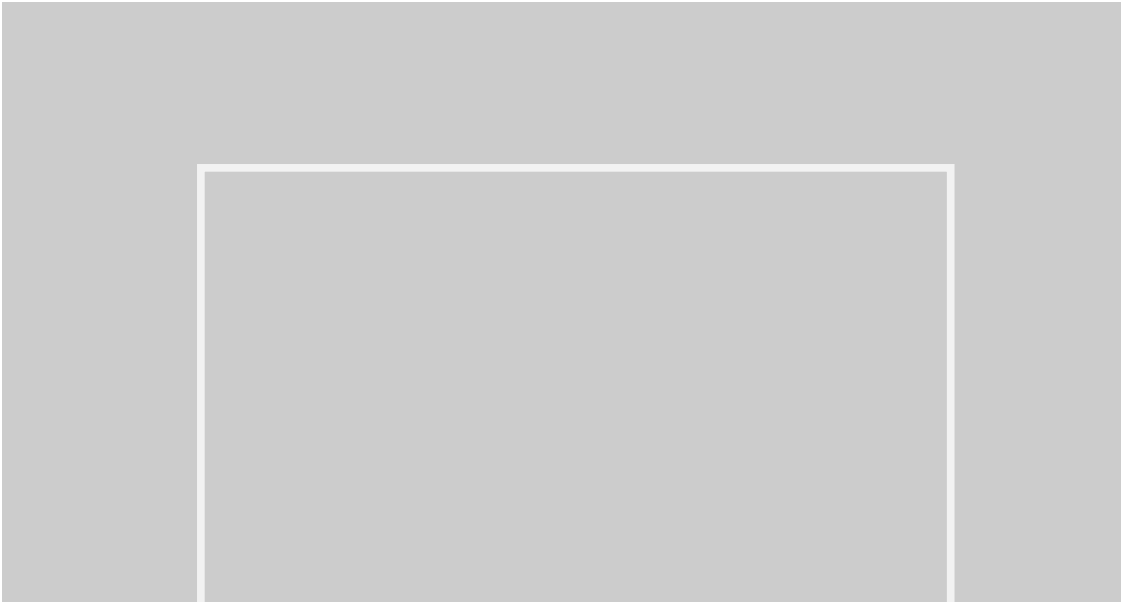
재활용품 보관량 및 단가 추이('20.7 ~ '21.10)

□ 보관량(톤)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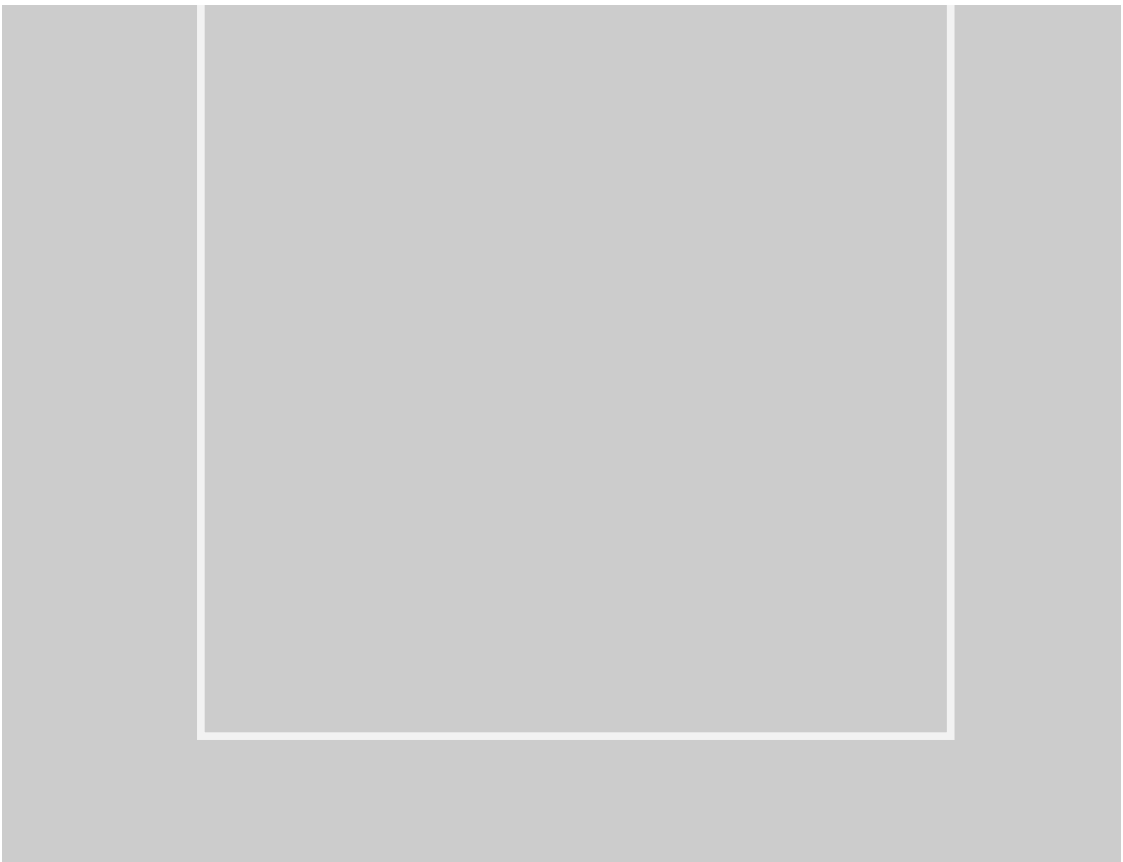


□ 단가(원/kg) 추이





۲۱۵ **۲۱۵**



I. 개요

1

점검 필요성

- 「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」 발표('20.7.30.)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추진
 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再生资源 수요급감에 이은 재활용업계 수익성 저하로 인한 수거중단 우려 등 기존 수거체계 한계점 개선 목적
- 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
 - 추진 미흡 과제 파악·개선, 우수사례 전파 계기로 활용
 - 현장에서 각 과제가 효율적·효과적으로 정착·작동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코로나 장기화 시대 대비

2

추진경과

- ('20.4.24.) 「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」 발표 (사회관계장관회의)
- ('20.7.30.) 「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안」 발표(관계부처 합동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
- ('20.9.23.)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(관계부처 합동, 사회관계장관회의)
- ('20.12.24.)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발표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
 - ⇒ ①플라스틱 생산·소비를 원천 감축하고, ②수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, ③장기적으로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
- ('20.5월~)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상황 모니터링(주 1회)

Ⅱ.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(요약)

1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된 업계 신속지원 등 리스크 관리

□ 재활용 업계 지원대책 신속 추진

- (수거업계) 모든 공동주택에 가격연동제 확대독려(지자체 등)
 - 이물질(음식물 등)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, 재활용불가품(칫솔·불펜 등) 등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등 적정 분리배출방식 홍보(인포그래픽)
 - *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지원,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자원관리도우미 배치(9.7천명, '20.8~12)
- (선별업계) 143개 선별장에 선별지원·환경정리 등 단기일자리(1.1천명) 지원, '페트재질 트레이류' 대상 선별지원금(14원/kg) 추가지급 등
- (재생업계) 3차 추경에 따른 시장안정화자금(재활용산업육성용자 등 약 1천억원) 추가공급, 재생원료 공공비축창고 확충(1개소→4개소)

□ 1회용품·포장재 감축

- 다회용기 위생수칙 마련('20.8월) 등 1회용품 규제유예를 정상화하고 재포장 금지('21.1월)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연내 가시적 분위기 확산

□ 지자체 공공기능 강화

-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여 공공선별장 운영확대 및 선별잔재물의 공공소각장 처리지원추진, 비상대비 공공수거 전환계획 수립*

* 대체수거업자·집하장 등 사전확보, 지자체 추경 또는 예비비 편성 등

① (공공)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한 공공책임수거 전환

- 수거업체와의 계약주체를 '공동주택'에서 '지자체'로 변경하면서 민간 업체와 상생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
- 이와함께 공공선별장 확충·현대화(지하화), 재활용품 구매제 도입 방안마련,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추진

② (민간) 재활용 시장 경쟁력 및 탄력성 강화

- (생산) 재생원료 경쟁력 유지 위하여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및 시장 변동(유가·재활용품 가격 등)에 따른 EPR 분담금 차등화·연동추진('21)
- (선별) 선별품 품질등급(공개)에 따라 EPR 지원금 차등폭 확대('21)
- (재활용) 재생원료 대상 전과정 품질인증체계(첨가제·불순물 등) 개발('22), 재생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(분담금 경감, 재활용의무량 실적인정) 제공 등

③ (인프라) 감시·홍보 등 시장관리 인프라 확충

- 공동주택·선별장 재활용품 처리실적 의무보고('20.하) 및 잔재물 감시, 시스템간 연계(올바로(환경부)↔유니패스(관세청)) 통한 수출입 모니터링 확대
- 고부가 선별·재활용 R&D('19~'28) 및 자원순환 실천서약 확산 (~'20.12월, 10만명)

Ⅲ. 재활용시장 동향

- (원자재시장 동향)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국제유가, 수입펄프, 수입폐지 가격도 지속 상승 추세
 - (유가) '21.10월 기준 국제유가의 거래가격은 배럴당 81.6\$로 전년 평균(42.3\$) 대비 92.9% 상승
 - (펄프) '21.10월 기준 수입펄프(침엽수류)의 거래가격은 톤당 885\$로 전년 10월(540\$) 대비 63.9% 상승, 수입폐지 가격도 48.0% 상승
- (재활용품 가격 동향) 국제유가, 수입폐지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폐지, 폐플라스틱 가격도 지속 상승
 - (폐지) 압축상 매입가 기준 '21.10월 국내 폐골판지 가격은 151원/kg으로 전년 10월(69원/kg) 대비 118.8% 급등
 - (폐플라스틱) 폐플라스틱 중 국내 PET(압축) 가격은 '20.10월 209원/kg에서 '21.10월 331원/kg으로 58.4% 상승
 - (PE·PP, 펠렛) '20.10월 654원/kg·591원/kg → '21.10월 726원/kg·664원/kg, 11.0%·12.4% 상승
 - (EPS, 잉고트) '20.10월 441원/kg → '21.10월 577원/kg, 30.8% 상승
- (보관·물량) 공동주택 수거 원활, 민간선별장 보관 물량 여유
 - (공동 주택)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 안정화율* 증가('20.7월 60.2% → '21.10월 91.9%)
→ 폐플라스틱, 폐지 등 수거 원활
 - * 전국 공동주택(30,676단지) 중 공공수거 및 가격연동제 적용 비율로서, 안정화율이 높을수록 수거대란 발생 가능성 감소('20.11월부터 산정)
 - (민간선별장) 전국 민간 선별장(154개소) 보관률 26.5% → 물량 여유
 - 수도권 민간 선별장(77개), 재활용가능품목(PET, 폐비닐, 폐지 등) 실질 보관량 13,078톤 ('21.10월 기준 보관허용량 45,765톤 대비 28.6%)

IV. 추진상황 (과제별 이행상황 [붙임 1] 참조)

1

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된 업계 신속지원 등 리스크 관리

- (수거안정화) 전국 공동주택(30,676단지)의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 안정화율* 증가('20.7월 60.2% → '21.10월 91.9%) → 폐플라스틱, 폐지 등 수거 원활
 - 전국 공동주택에 가격연동제 확대 독려(국토부, 지자체 등), 공공책임 수거 법제화 추진('21.4월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)
 - * 전국 공동주택 중 공공수거 및 가격연동제 적용비율 : 재활용품 매각(수거) 대금을 재활용품 가격 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
- (자원관리도우미) 분리배출 취약지역(공동·단독주택 등)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 및 안내·홍보
 - ('20년) 분리배출 취약지역(공동주택)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유도 및 공공선별장에서 분리배출 지원 및 안내·홍보(422억원, 10,853명, 일일 4시간 근무)
 - ('21년) 분리배출 취약지역(공동·단독주택 등)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 및 안내·홍보(947억원, 9,828명, 일일 8시간 근무)
- (수거업계 지원) 선별업계 선별지원금 지원, 재활용업계에 재활용 산업육성융자금 추가공급
 - 코로나19 대응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('20.9~'21.5, 3,250백만원), 재활용 시장 안정 위한 시멘트소성로 열회수사업 지원('20.12~'21.4, 744백만원)
 - 선별업체의 선별품 등급 차등화 기준 확정('20.11월) 및 차등지원금 지급('21.6월, 1,249백만원)
 - EPR 의무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 시 분담금 경감 및 재활용 의무 실적 인정(자원재활용법령 개정, '21.5)
 -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(2,000억원) 중 재활용업 1,399억원 지원('20.12)

- (재활용품 비축) '23년까지 비축역량 8배 이상 증가(2,870톤→23,670톤)
 - (공공시설 확충) 안성·대구·청주 등 공공비축기지 3개소 준공('21.5월), 음성 공공비축기지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('21.10월~)
 - * '20 1기(정읍, 2,870톤) → '21 3기(안성·대구·청주, 10,000톤) → '22 2기(음성, 10,800톤) → '23 2기(수도권 협의중)
 - (재활용품 비축) '20.3~12월까지 폐지 21천톤, PET 9천톤 등 재활용품 35.6천톤 비축*(346백만원 지원)으로 폐기물 적체 해소
 - * '20년 비축 물량은 재활용품 단가 상승,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'21.5월 기준 전량 반출완료

- (지자체 공공기능) 수거 취약시기 대비 적환장 확보 및 민간선별장 잔재물 처리 지원
 - (비상 공공수거) 설, 추석 등 폐기물 수거 취약 시기 대비 지자체별 적환장 확보계획 수립(전국 261개소, 168천톤) ⇒ 설·추석 이후 원활한 수거·처리중
 - (공공처리) 민간 선별장 잔재물에 대한 공공소각장 연계 처리('20.7~, 약 27천톤, 32.5억원)

- (1회용품·포장재) 1회용품 사용제한 단계적 정상화 및 택배 등 포장 폐기물 저감대책 추진
 - (1회용품) 다회용컵 사용 확산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('20.11.26, 커피전문점 등 19개사)
 - (포장재) 재포장 등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('20.9.21 식품업계 등 33개사),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('20.12.22),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('20.11월~)
 - (식품용기) 환경부-식약처 간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('21.5) 및 재생원료 사용기준 마련 등 고시개정('21.9, 식약처)

2

공공책임수거 전환 및 재활용시장 전과정 제도개선

- (공공수거제 법제화)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 직접·대행 계약, 가격 연동제 적용 의무화 등 지자체 책임 강화 법안 추진 중
 - *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안 국회계류(홍석준 의원 대표발의, '21.4월)
- (시장 모니터링)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전담조직인 재활용시장관리 센터를 한국환경공단내에 설치·운영('21.7월~)
 - 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 개정·시행('21.7.6)
- “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”(18.5월)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환경공단 내 既 운영 중 →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('21.7월)
- (폐플라스틱 수입금지)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의 국내 재활용 촉진 및 적체 방지 위해 폐플라스틱 중 PET·PE·PP·PS 수입금지중('20.6.30~)
 -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발표('21.1월) 및 업계 의견수렴('21.2월~)을 통해 폐플라스틱 수입금지* 추진('22~)
 - * 폐플라스틱(폐HDPE, 폐PC, 폐ABS수지 제외), 폐섬유 수입금지 위한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개정안 행정예고('21.10.19~11.8)

<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발표('21.1월) 주요내용>

▲ '30년에는 폐금속류 이외에는 원칙적 수입금지 또는 제한

분 류	품 목	수입 금지·제한 계획
범주 I (수입 금지)	① 폐플라스틱	○ '22.1월부터 수입 금지
	② 폐섬유	○ '22.1월부터 수입 금지
	③ 석탄재	○ '23.1월부터 수입 금지
	④ 폐타이어 폐지(혼합폐지)	○ '23.1월부터 수입 금지 ('22.1월부터 수입 금지)
범주 II (품질기준 강화)	① 폐지(폐골판지)	○ '23.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時 수입 제한
	② 오니	
	③ 분진	
범주 III (검사 강화)	① 폐배터리	○ 수입은 허용 ○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준 및 통관 前 검사 강화
	② 폐금속	
	③ 폐전기전자제품	

□ (자원순환 대전환)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“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” 수립(20.9.23 사회관계장관회의)

- ◇ (발생단계) 제품 생산과정의 폐기물 감량목표 관리(‘22, 자원순환기본법 개정),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(‘22) 등
- ◇ (배출·수거단계)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한 분리배출 체계 개선(‘20~),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주택 공공책임수거 전환(~’24)
- ◇ (선별·재활용단계) 지자체 공공 선별시설 단계적 확충* 및 현대화,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(‘21),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
 - * 공공 선별시설 : 187개소(‘18) → 252개소(‘25) 확충(기초지자체 당 평균 1개 이상)
- ◇ (최종 처리단계)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(‘21, 폐기물관리법 개정), 불법 폐기물 등 사회안전망으로 공공폐자원 처리시설 설치(‘21~) 등

□ (脫플라스틱 대책 발표) 플라스틱 생산·소비를 원천 감축하고,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며, 장기적으로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(20.11.30)

- ◇ 원칙 : ①원천 감량¹⁾ → ②재활용 확대²⁾ → ③안전 처리³⁾
 - 1) 생산·사용금지, 타 재질 전환, 경량화
 - 2) 물질 재활용, 화학적 재활용, 열에너지 회수
 - 3) 잔재물 소각·매립, 불법 방치·투기 방지

◇ 추진 목표

○ (단기) 그린뉴딜(재활용업 육성) 연계,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(~’25년)

- 원천 감량 : ‘20년(BAU) 대비 ‘22년 10%, ‘25년 20%

* 발생량 : 145만톤(‘18) → 160만톤(‘20, BAU) → 144만톤(‘22) → 128만톤(‘25)
 감량률 100% △10% △20%

- 재활용 확대 : ‘20년(BAU) 대비 ‘22년 10%, ‘25년 30%

* 재활용량 : 78만톤(‘18) → 86만톤(‘20, BAU) → 86만톤(‘22) → 89만톤(‘25)
 재활용률 54% 54% 60% 70%

○ (장기)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연계, 脫플라스틱 사회 전환(~’50년)

- 2030 플라스틱 30%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

*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29% 감축

-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계 플라스틱 제로화(~’50년)

*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% 대체

V. 평가 및 향후 계획

1 평가

-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이행과제에 대한 서면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지연 없이 적기 추진 중
- 또한,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포함하여 “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(20.9)”, “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(20.11)” 등 후속대책 수립·추진중
⇒ (재활용시장 동향)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작년 연말 이후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안정적 선별장 보관량 유지중

※ 과제별 진행사항 점검 방식

- ▲ 코로나19 상황 고려,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서면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, 필요시 현장조사 등으로 종합점검

2 향후 계획

- **주기적 이행상황 점검**
 - 주기적으로 소관 이행과제별 이행상황 점검
 - **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될 경우 선별장, 재활용업체 대상 현장 점검 확대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점검 방식으로 전환**

붙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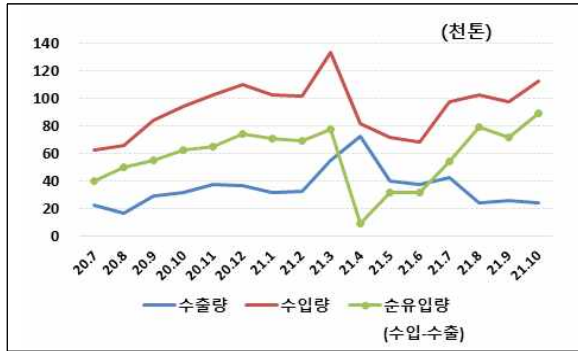
이행과제별 추진상황

추진 과제	소관	이행결과
1. 리스크 관리과제('20.하반기)	총 31개 과제중 19과제 완료, 12과제 추진중	
1] 업계지원		
① 가격연동제 전국단위 확대 독려(상시)	환경부·국토부·지자체	추진완료
②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배포(8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③ 공동주택,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운영(8~12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④ 펠트재질 트레이류 선별지원금 지급(8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⑤ 고품질 펠트 재생원료 생산 생태계 구축	환경부	추진완료
⑥ EPR 시장안정화자금 조성 및 지급(9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⑦ 기업지원자금 신속집행	환경부	추진완료
⑧ 재생원료 공공비축 인프라 확대 및 제도화('21~)	환경부	추진완료
2] 감량		
① 재포장 금지 의견수렴(9월) 및 고시제정(12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② 재포장 세부지침 마련 및 자발적 협약 체결	환경부	추진완료
③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사업 추진	환경부	추진완료
3] 지자체 공공기능 강화		
① 비상 공공수거 대책 수립(8월)	환경부·지자체	추진완료
② 공공선별장 운영 확대, 관내 선별잔재물 일부 공공 소각장 처리계획 수립(7월~)	환경부·지자체	추진완료
2. 제도개선 과제(~'22)		
1] 공공수거 전환		
① 공공책임수거 법제화 추진('22)	환경부·지자체	추진중
② 공공선별장 단계적 확충 및 고도화('21~)	환경부	추진중
③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량 설정('22)	환경부	추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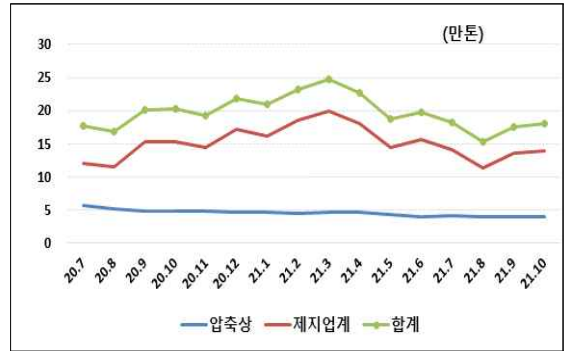
추진 과제	소관	이행결과
2 민간 경쟁력 제고		
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EPR 부담금 차등화('21)	환경부	추진중
② 일회용컵 표준용기 지정('22)	환경부	추진중
③ 제품생산시 재생원료 사용비율 '30년목표 권고('22)	환경부	추진중
④ 선별품 품질 평가.공개, EPR 지원금 차등확대('21)	환경부	추진완료
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('21~)	환경부 · 지자체	추진중
⑥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등 자원재활용법 개정('21)	환경부	추진중
⑦ 자발적협약 관리 품목의 EPR 전환('21~'22)	환경부	추진중
⑧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방안 마련('21)	환경부 · 식약처	추진중
3 시장관리 인프라		
①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방식 개선	환경부 · 관세청	추진완료
②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상설조직화('21)	환경부	추진완료
③ 미신고 수거업체(고물상) 제도개선안 마련('21)	환경부	추진중
④ 폐지.고철등 관세청-환경부간 시스템 연계	환경부 · 관세청	추진완료
⑤ 배출.수거.재활용 전주기 자원순환성 제고 R&D('22~'27)	환경부	추진중
⑥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활성화('20.7~12월)	환경부	추진완료
⑦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선('20.하)	환경부	추진완료

☐ 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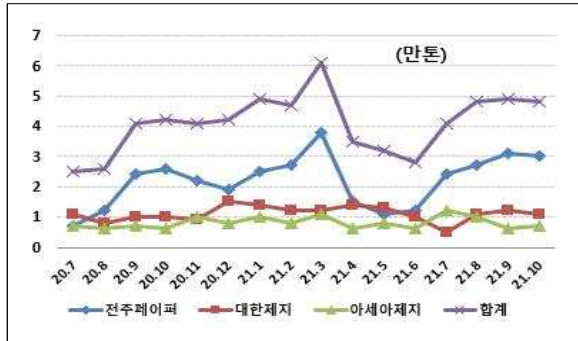
< 수출입량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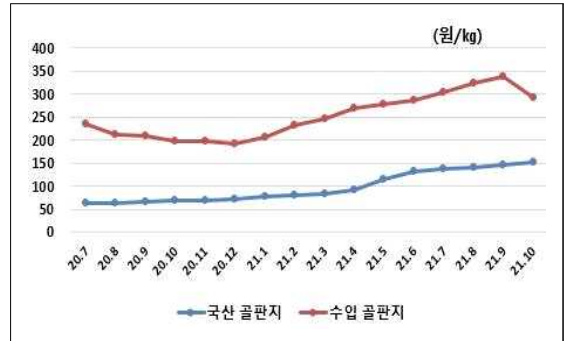
< 재고량 >



< 주요 제지업체 수입실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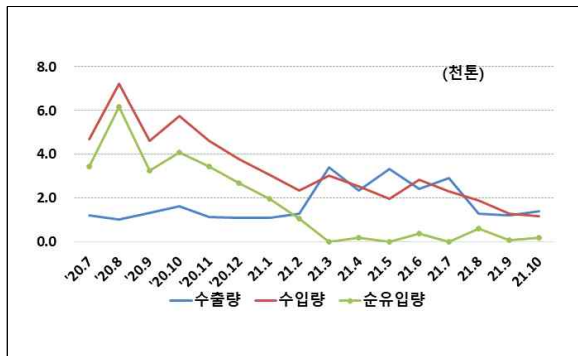


< 판매단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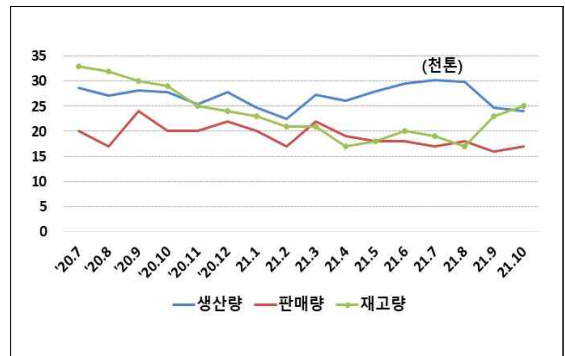


☐ 페트(PE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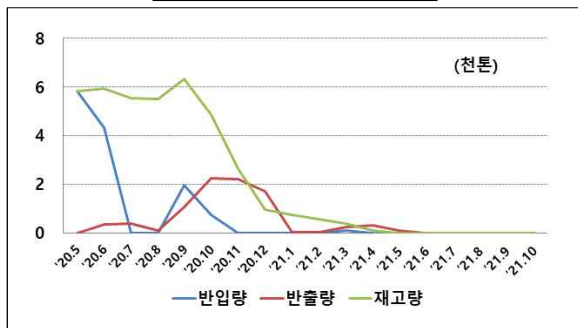
< 수출입량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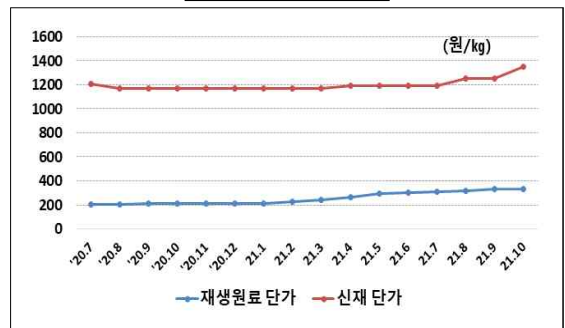
< 생산·판매·재고량 >



< 공공비축 현황 >



< 판매단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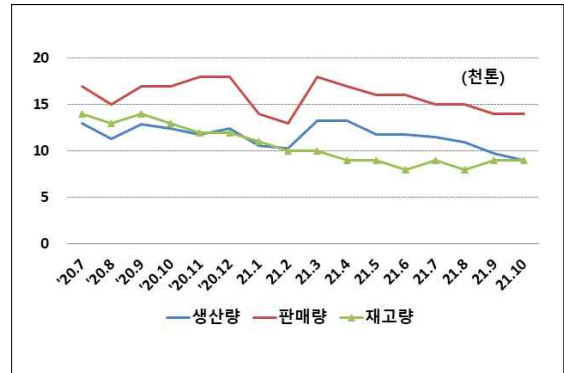


□ 폴리에틸렌(PE)

< 수출입량 >



< 생산·판매·재고량 >



< 공공비축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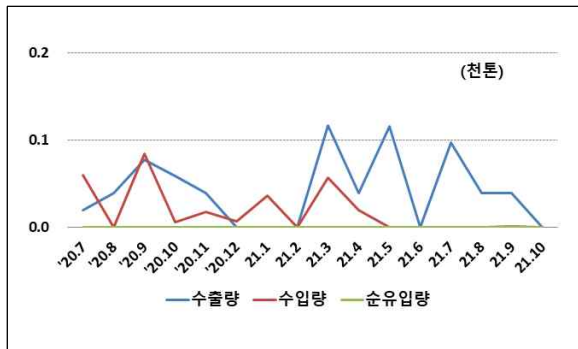
< '20년부터 공공비축 없음 >
* 필요시 공공비축

< 판매단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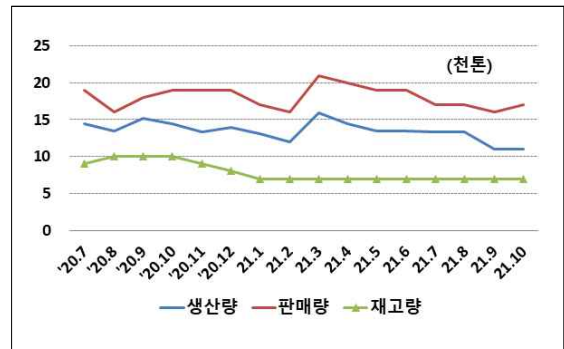


□ 폴리프로필렌(P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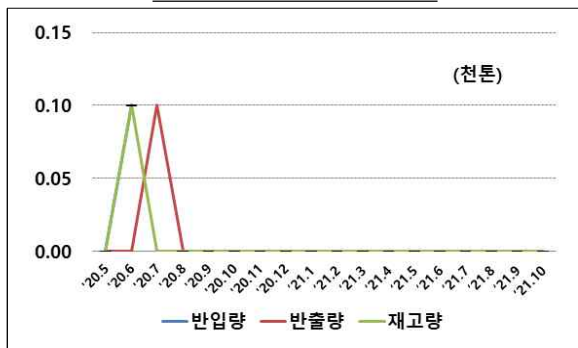
< 수출입량 >



< 생산·판매·재고량 >



< 공공비축 현황 >



< 판매단가 >

